



## 2016년 노숙인의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방안

김유미 연구원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안)을 발표함. 노숙인의 규모는 2016년 10월 현재 1만 1,340명으로 남성과 고연령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우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이용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빈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이에 금번 실태조사에 기반한 의료지원 접근성 강화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의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에 발표한 「제1차 노숙인 등<sup>1)</sup>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후속으로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 대책을 발표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4년 만인 2016년 2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실태조사 없이 수립된 계획안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음<sup>2)</sup>
  - 노숙인 등을 시설노숙인(자활, 일시보호, 재활·요양)과 거리노숙인으로 한정하고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홈리스들을 배제하여 노숙인의 규모를 과소추정하였음
- 이에 근거중심의 노숙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제1차 종합계획의 보완 대책을 발표함

■ 노숙인의 규모는 1만 1,340명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연령보다는 고연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부적응 또는 사고, 경제적 결핍 등으로 인해 노숙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남<sup>3)</sup>

- 노숙인 중 남성이 73.5%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33.5%, 60대 27.5%, 40대

1) 기존의 불량인, 노숙인의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합

2) 빈곤사회연대(2016. 2. 5), 〈성명서〉 전략 부재, 요건 미달 제1차 노숙인 등 복지 종합계획 즉각 폐지하라!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9. 28),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안)

17.8% 순으로 저연령보다 고연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노숙을 시작하게 된 이유로 질병 및 장애가 25.6%를 차지하였으며, 이혼 및 가족 해체(15.3%), 실직(13.9%), 알코올 중독(8.1%) 순으로 나타남

■ 노숙인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우울도가 높은 편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빈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노숙인의 유병률은 대사성질환이 36.1%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질환 29.5%, 정신질환 28.6% 순으로 나타났고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 증상이 높게 나타나 일회성 진료나 응급성 처치만으로는 노숙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sup>4)</sup>
- 노숙인은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에서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진료시설은 전국 254개소에 불과하며,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무료현장진료소도 5개소에 불과함<sup>5)</sup>
-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중 하나인 1종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자는 전체 노숙인 중 4.2%에 불과하며, 98%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도 큰 것으로 나타남<sup>6)</sup>

■ 이에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의료지원 접근성 강화정책을 통해 노숙인에게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만성질환, 우울증 등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료지원 접근성 강화정책에는 1)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정 2) 노숙인 진료시설 확대 3) 지방자치단체-민간의료기관 협약체결 4) 만성적 거리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개입 및 사례관리 강화 등이 있음
- 금번 정책은 노숙인의 규모, 유병률, 지리적 접근성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숙인 등의 의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kiri**

4) 윤희상 외(2013), 「노숙인 쉼터거주자의 건강행태, 건강수준과 보건의료기관 이용양상」, 한국보건간호학회, Volume 27, No. 3, pp. 578~591

5) 보건복지부(2016. 2), 제 1차(2016~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현재는 3개소(서울역 무료진료소, 영등포 무료진료소, 부산 희망 등대 종합 지원센터)만 운영 중임

6)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통계』; 보건복지부(2017), 『2016년 보건복지백서』; 노숙인 중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중 추이: 2012년 1.8%, 2013년 4.5%, 2014년 5.0%, 2016년 4.2%